

2. 대통령 경제 회견의 주요 내용

- (향후 정책 방향)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,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기 진작 정책 추진
- (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) 금융 구조조정을 9월 말까지 일단락짓고 금융 기능의 정상화에 주력하며, 기업 구조조정은 12월 말까지 매듭짓되 업종전문화 등 기업 핵심역량 개발에 주력할 것임
- (경기 부양) 신속적인 통화신용정책 및 재정적자폭 증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고용을 확대함

□ 향후 정책 방향

-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회견(9월 28일)에서, 향후 정책의 중점을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과 경기 진작에 둘 것으로 천명함
 -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, 기업, 노동,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임
 - 재정적자폭을 늘려 주로 사회간접자본, 정보화 사업, 미래관련 산업 등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기 진작 및 고용 확대 도모
 -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기업 활동의 자유도 강화

□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정책

- 금융 구조조정은 일정대로 9월 말까지 일단락짓고, 신용 경색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임
 -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본격 매입, 증자 실시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의 정상화 추진
 - 우량, 회생 가능 중소기업 지원, 대기업 기업개선자금 지원, 은행대출제도 객관화를 통한 대출심사 완화, 은행감독제도의 투명화 등을 통해 신용 불안을 해소
- 5대 그룹의 빅딜 등 구조조정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되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임
 - 기업 구조조정 5대 과제 중 핵심역량 집중(업종전문화) 과제만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함

- 적절한 경기 부양 정책 만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 기반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 공유
- 구조조정 완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 피력
 - 구조조정 작업이 예정된 순서와 일정에 따라 완수될 것이라는 견해와 의지 천명
 - 오는 연말 이후에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可視化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 피력

□ 경기 부양책

-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탄력적 운영
 - 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충분한 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
- 재정적자폭을 확대하여 사회간접자본, 정보화사업, 미래관련 산업을 육성,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것임
 -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5%인 20조 원까지 증대하기로 IMF와 이미 합의

□ 실업 대책

- (4대 대책) 고용유지, 직업훈련, 일자리 창출, 사회안전망 확충
 -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고용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
 - 올해 총 10조 7백억 원의 예산을 실업 대책에 사용

□ 기타: 제2 환란 가능성 부인

- 단기외채비율 저하(1997년 말 44.3% → 현재 25.3%)
- 1998년도 외채원리금상환 부담률은 14%에 불과(IMF 권고수준은 20%)
- 금년말 상환 부채 약 90억 달러(민간부문 60억 달러, 공공부문 30억 달러)
- 내년도 상환 외채 규모는 360억 달러 정도지만,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440억 달러 조달 가능

(박 동 철 dcpark@hri.co.kr ☎724-4030)